

한국언론 90년의 정신사적 이해

김민환 (고려대 언론학부 교수)

1. 한국 근현대사, 어둠과 빛, 그리고 언론

2. 일제하 주류 언론의 대외상황 인식

- 1) 전쟁이 난다. : 전쟁필지론
- 2) 동양이 위태롭다. : 동양위기론
- 3) 동양이 망쳐야 한다. : 동양공영론

3. 주류 언론의 대응전략

- 1) 중추냐 민중이냐? : 중추세력 형성론
- 2) 대포냐 대포를 질 힘이냐? : 실력양성론
- 3) 분파냐 대동이냐? : 대동단결론

4. 실용주의의 현대적 진화

5. 실용주의를 보는 두 가지 시각.

6. 결어

한국언론 90년의 정신사적 이해

김민환 (고려대 언론학부 교수)

1. 한국 근현대사, 어둠과 빛, 그리고 언론.

돌이켜보면 지난 한 세기는 한국사에 있어서 영욕이 극단적으로 교차하는 시기였다. 세기 초에 우리는 나라를 잃었지만 세기말에 이르러 우리는 선진국 문턱 앞에 다가섰다. 그 사이에 우리는 반식민지, 식민지, 그리고 참혹한 전쟁을 겪었지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루는 기적 같은 일도 몸소 체험했다.

역사가 어둠으로 채워지면 사가들은 자연스럽게 질곡의 원인을 찾는다. 사가들에게 이런 일은 아주 익숙한 일이다. 그런 방향의 연구업적도 많다. 그러나 밖에 나가 보면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경이의 대상이다. 독자적인 방식으로 자본주의의 고지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보기를 찾을 수 없는 강고한 투쟁을 통해 ‘쓰레기더미’ 위에 민주주의를 꽃피운 나라가 바로 바깥사람들 눈에 비친 우리 모습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우리는 이쯤에서 Weber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16세기 이전에는 중국이 서구보다 잘 살았다고 한다. 그러나 근대 자본주의는 중국이 아닌 서구에서 발전했다. 왜 그랬을까? 이 물음에 매달린 Weber는 결국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가 자본주의 정신을 불러일으켜 서구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프로테스탄티즘이 교도들로 하여금 직업을 소명(부름, 천직)으로 여기며 금욕을 실천하게 했고, 그런 자본주의 정신이 자본주의를 발전시킨 동력이 되었다는 것이다. 사회변화에 미치는 요인은 많겠지만 정신적 요인이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지난 1백여 년 동안 우리가 급속한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룬 정신적 동인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만약 어떤 정신적 요인이 있었다면 그것은 가정, 학교, 교회 등 다양한 사회제도가 다양한 방식으로 형성하고 보편화하였을 것이다. 물론 한국 근대사 전개과정에서 어떤 사회제도 못지않게 언론 역시 정신적 요인의 형성과 보급에 이바지하였다. 그럼 우리 언론이 그동안 강조해온 정신적 요인은 무엇일까? 이 소고는 바로 이 의문에 그 출발점을 두고 있다. 필자는 그동안 확대경을 들고 개화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신문의 사설을 읽는데 연구 시간의 대부분을 보냈다. 많은 사설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느낀 바를 바탕으로 우리 언론의 정신사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논의를 전개하기 전에 전제할 것이 하나 있다. 정신적인 요인이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의 동인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장기적 과정을 거쳐 어떤 ethos가 형성된 연후에 그것은 역사 전개과정에 의미 있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특히 어두운 시절에 형성된 정신은 그 수명이 길고 영향 역시 클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주로 일제강점기에 주류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강조한 에토스(ethos)를 중심으로 논의를 펴기로 한다.

2. 일제강점기 주류 언론의 대외상황 인식.

지난 세기에 우리 역사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 변인은 외세였다. 따라서 대외상황을 어떻게 파악하는지에 따라 대응전략이 달라졌다. 그럼, 일제강점기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대외적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였는가?

두 신문의 대외문제 인식은 전쟁필지론(戰爭必至論), 동양위기론(東洋危機論), 동양공영론(東洋共榮論)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위의 세 가지 인식은 1920년대 초기부터 1940년까지 주류 신문의 대외문제 인식의 축을 이루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인식에는 소소한 차이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한 묶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쟁필지론과 동양위기론, 동양공영론 등은 유기적 관계로 상호 논리적 바탕을 제공하면서, 아울러 현실적 대응방안을 불러내는 논리적 연결고리로 작동하였다. 즉 전쟁필지론이 동양위기론을 이끌어내고 동양위기론이 다시 동양공영론을 이끌어냈으며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대응전략을 세우게 된 것이다.

1) 전쟁이 난다. : 전쟁필지론.

두 신문은 구미 정세의 추이가 국제 정세에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전제 하에 구미 정국의 불안이 세계적인 전쟁을 일으키게 될 것으로 보았다.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고 말 것이라는 이런 인식은 1930년대에 들어 공황이 심화하면서 더욱 확고해졌다.

불안의 궁극적 원인을 두 신문은 자본주의의 발전과정과 그에 따른 이념적 갈등에서 찾고자 하였다. 두 신문은 자본주의의 모순 때문에 사회주의와 파시즘이라는 전혀 이질적인 이념이 대두하고, 이것들이 자본주의와 삼각 갈등을 일으키게 된 것으로 보았다.

이들 신문에 의하면, 국제적 갈등은 “무한한 군확(軍擴) 경쟁¹⁾”을 촉발해 여러

1) 『동아일보』 1933년 11월 5일자 사설.

나라가 “대포거함주의(大艦巨砲主義)²⁾”로 나가게 만들었다. 이런 추세로 인해 “전후 국제주의의 반동이었던 국가주의가 한 걸음 나아가 불력주의³⁾”로 발전했다. 이런 변화는 자연히 국제연맹의 무력화를 빚어 평화적인 접근이 어려워짐으로써 “세계를 분할하고자 하는 전화(戰禍)⁴⁾”가 예상되고 있다는 데 두 신문은 인식을 같이 하였다.

두 신문은 앞으로 일어날 전쟁은 불가피하게 참혹한 대전쟁(大戰爭)이 될 것이라고 인식했다. ‘제국주의 국가들의 공멸을 촉촉(催促)할 전쟁⁵⁾’이 나거나, ‘전쟁을 절멸시키는 전쟁⁶⁾’이 일어날 화근이 착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두 신문은 전쟁의 전선이 어떻게 형성될 것인지를 가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들 신문은 독일과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추축국이 세계 전쟁을 일으킬 개연성이 높다고 보았다. 특히 1930년대 말에 이르러 영국과 미국, 러시아 3국이 동맹체제를 갖추자 이것이 독일과 이탈리아를 자극하여 ‘독이추축(獨伊樞軸)을 강화해 항쟁준비를 일층 맹렬히 할 것⁷⁾’이라고 전망하였다. 두 신문은 파시스트 국가를 악으로 규정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즉 사회주의 역시 국제정세의 불안을 초래할 잠재성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주의가 식민지 해방운동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긍정론도 조심스레 내비쳤다.

2) 동양이 위태롭다. : 동양위기론.

두 신문은 구주(歐洲)의 정세가 정리되면 서세(西勢)의 동점(東漸)이 현실화하리라고 강조했다. ‘전전(戰前)부터 세계 정책이 태평양에 집중될 경향이 있었지만 구주의 분운(紛紜)이 계속되어 발전할 여유가 없었으나 이제 구주의 정경계(政經界)가 안정하게 되니⁸⁾ 태평양 문제가 대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두 신문은 특히 ‘영국과 미국이 필연적으로 공동보조를 취해⁹⁾ 상부상조하여 일본을 적으로 삼아 ‘동양 시장 이권에 대한 실제적 확충의 경쟁¹⁰⁾’을 벌일 것으로 보았다. 동양 전판이 서세에 농락당할지 모른다는 이런 위기의식은 이들 신문으로 하여금 동양공영론을

2) 『조선일보』 1935년 12월 5일자 사설.

3) 『동아일보』 1934년 5월 20일자 사설.

4) 『조선일보』 1933년 9월 6일자 사설.

5) 『조선일보』 1927년 8월 5일자 사설.

6) 『동아일보』 1935년 4월 5일자 사설.

7) 『동아일보』 1939년 5월 5일자 사설.

8) 『동아일보』 1924년 8월 20일자 사설.

9) 『동아일보』 1935년 3월 5일자 사설.

10) 『조선일보』 1933년 7월 20일자 사설.

수용하게 하였다.

3) 동양이 뭉쳐야 한다. : 동양공영론.

두 신문은 궁극적으로 서세가 태평양지역으로 밀려올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서 한중일(韓中日)의 동양 3국이 하나로 뭉쳐 동양의 공존공영을 기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이런 동양공영론은 이미 개화기에 관영신문인 『한성주보』가 제시한 바 있다. 이 신문은 우리나라가 독립자강하여 영원히 걱정 없을 것을 보장하는 방법은 ‘양국(중일)이 결탁하는 후원을 얻는 것¹¹⁾’이라고 역설하였다.

동양공영론은 개화기에 『독립신문』이 일본맹주론을 받아들임으로써 질적 변화를 보였다. 이 신문은 일본이 명치유신 이후 개화에 성공하여 구미의 선진 제국주의 국가와 비등할 정도로 발전한 것을 주목하고 ‘오늘날의 일본은 황인종의 앞으로 나아갈 움푹이며 안으로 정치와 법률을 바르게 할 거울이며 밖의 도적을 물리칠 장성(長城)¹²⁾’이기 때문에 ‘동양제국 중에 가히 맹주가 될 수 있다’¹³⁾고 보았다. 개신유학자들이 주도한 『황성신문』 역시 일본을 ‘동양 세계에 일대 보장의 임(任)을 가(苛)한 자¹⁴⁾’라고 인식하고 동양의 맹주인 일본의 ‘선각자의 지도가 무(無)하면 3국의 대세를 공제(共濟)할 수 없다¹⁵⁾’고 주장하였다.

『독립신문』과 『황성신문』이 일본맹주론을 중심으로 편 동양공영론은 1905년에 이른바 보호조약이 체결된 뒤 한반도에 대한 일본 침탈이 본격화하자 친일적인 인사나 단체에 의하여 동양주의로 발전하였다. 이전의 동양공영론은 각국의 자주권을 전제로 일본의 주도하에 서세동점에 대응하자는 것이었지만, 새로이 전개되는 동양주의는 자주권의 유보를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동양공영론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이런 인식의 변화를 주목한 『대한매일신보』는 ‘동양주의는 밖으로 보면 아름다우나 그 리허(理虛)는 실상 참혹하다¹⁶⁾’고 강조하였다. 이 신문은 ‘한국이 망하고 민족이 없어지면 동서양 경쟁에 동양이 이기고 서양이 패하여 구미 각국이 동양 사람의 천지가 되기로 한국인에게 무슨 유익함이 있겠느냐¹⁷⁾’고 반문하고, ‘한국인이 동양주의를 이용하여 국가를 구하는 자 없고 외국 사람이 동양주의를 이용하여 나

11) 『한성주보』 1886년 3월 8일자 사의.
12) 『독립신문』 1899년 11월 9일자 논설.
13) 『독립신문』 1899년 6월 19일자 논설.
14) 『황성신문』 1899년 4월 12일자 논설.
15) 『황성신문』 1906년 4월 12일자 논설.
16) 『대한매일신보』 1908년 12월 17일자 논설.
17) 『대한매일신보』 1909년 5월 29일자 논설.

라 사랑하는 정신을 빼앗는 자 있으니 경계하여 삼갈 것¹⁸⁾’이라고 역설하였다.

일제 강점기에 주류신문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개화기에 광범하게 제기되었다가 『대한매일신보』에 의해 비판 받은 동양주의를 다시 받아들인 것은 두 가지 다른 각도의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서구 제국주의가 동양 전판을 위협하는 현실에 압도되어 일본을 동양을 지킬 맹주로 받아들였을 개연성이다. 당대에 우리 지식인사회에는 서구에서 황화론(黃禍論)이 폭 넓게 퍼져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런 인종주의는 동아시아인들에게는 반대로 서구에 대한 반감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본토에 대한 서구 제국의 침탈은 동양 전판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반서구적 위기의식을 증폭시켰다. 30년대 후반에는 서구 제국주의가 태평양지역으로 밀려와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이 지식인사회에 널리 퍼졌다. 이런 상황전개는 우리 언론에 동양주의에 대한 미련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둘째, 자주독립이 미구에 실현되기는 어렵다는 비판론이 동양주의로 굴절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두 신문은 우리나라가 자주권을 잃고 이미 식민지로 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 만주를 점령하고 나아가 중국 본토를 침략하는 일련의 사태 진전을 보며 자주독립에 대한 의욕이나 희망을 상실하고, 독립보다는 이른바 내지와 식민지 간의 차별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관심을 옮겨갔다. 이에 따라 두 신문은 동양주의를 일본의 침략주의를 비판하는 논거로 자주 이용하였다. 일례로 『동아일보』는 “동양의 단결을 창도하고도 기실 동양의 결속을 파괴한 일본의 행동에 대해 통석(痛惜)의 념(念)을 금치 못 한다¹⁹⁾”고 일본을 비판하였다. 특히 중일문제를 들어 일본이 대의를 저버리고 동양에 대한 침탈에 전념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동양의 또 다른 중추인 중국이 실력양성을 통해 자강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일보』 역시 일본이 공영을 추구하기보다 침략주의로 흐르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 자주 공영론을 꺼내들곤 하였다.

3. 주류 언론의 대응전략.

두 신문은 제국주의 시대를 맞아 국권이 허약하기 짝이 없는 상황에서 무장투쟁을 통해 독립을 쟁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국제정세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다리며 대세(大勢)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동양의 공영을 추구해야 할 동양의

18) 『대한매일신보』 1909년 8월 10일자 논설.

19) 『동아일보』 1920년 7월 20일자 사설.

맹주인 일본이 공영주의에서 벗어나 침략주의로 나서고 있으므로, 국제사회에서 대세가 일본에 부정적으로 변화할 때 민중을 동원하여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동아일보》는 한 사설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약자가 강자에게 반항할 경우 실패가 필연의 결론이다. 그렇다고 압박을 받는 민족이 압박하는 민족과 비등한 실력을 갖추기까지 기다릴 수도 없다. 이에 통찰을 요하는 바는 성공적인 운동은 세계의 대세와 병행한다는 점이다. 대세를 업고 민심의 폭발을 얻어 민심을 자기화하여 운동을 이끌 인물이 있을 경우 운동은 성공할 수 있다.²⁰⁾

이런 대세대비론은 동양주의와는 본질적으로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었다. 서구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동양이 뭉쳐야 한다는 논리와, 대세가 일본에 불리해질 때 민중의 폭발력을 얻어 독립을 쟁취한다는 논리는 병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본이 국제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것은 서구 세력이 일본을 압도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런 상황에서 동양주의의 존립기반은 소멸한다. 이런 모순에 대한 명쾌한 해명은 어느 사설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 단지 민족자결원칙이 지배하는 새로운 질서에 대한 실낱같은 기대를 안고 대세의 전개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고자 하였다.

이런 대세대비론(大勢對備論)은 식민지상태에서 즉자적인 독립투쟁을 벌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대세에 대비해야 한다는 준비론(準備論)의 성격을 띤 것이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두 신문은 사설을 통해 장기적으로 민족의 역량을 축적할 방법론을 제시했다. 두 신문의 사설을 관류하고 있는 방법론은 본질적으로 실용주의적이었다. 실용주의 노선의 근간은 중추세력 형성론(中樞勢力 形成論), 실력양성론(實力 養成論), 및 대동단결론(大同團結論)이었다. 이 가운데 실력양성은 그 핵심가치였고, 이 핵심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중추세력을 형성하고 그 세력을 중심으로 대동단결해야 한다는 것이 실용주의의 논리 구조였다.

1) 중추냐 민중이냐? : 중추세력 형성론.

춘원 이광수는 상해에서 돌아온 후 1921년 『개벽』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장성된 사회에는 중심인물인 개인보다 중추계급인 일 계급이 그 사회의 형성과 유지의 핵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추세력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²¹⁾. 그는 이듬해 5

20) 『동아일보』 1926년 8월 20일자 사설.

월 『개벽』에 발표한 <민족개조론>을 통해 한국 사회가 개항 이래 변화를 시도했지만 자각이 부족하여 제대로 변화를 이루지 못했다고 분석하고, 민족개조를 위한 이른바 10단계론을 제시했다²²⁾. 주요한 것을 간추리자면, 개조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개조의 신 계획을 수립한 뒤, 단체를 결성하여, 일반 민중에 선전하고, 민중의 지지를 얻어, 개조사상이 절대적 진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 그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 단체 결성이었다. 이 주장은 곧 이전의 중추세력 형성론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었다. 그는 탄탄하게 조직되고 사상적으로 의식화된 불세비키 리더십을 예로 들면서, 교육과 단체를 통해 한국에서 중추세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중추세력은 그럼 어떤 사람들로 구성할 것인가? 중추세력이란 그에 따르면 지식자(知識者)와 유산자(有産者) 가운데서 형성되는 엘리트 전위대였다. 지식 있는 유지가 개혁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중추세력은 어느 규모가 길러야 하는가? 그는 1천이나 2천인까지는 길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추세력을 기르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릴 것인가? 그는 10년이나 20년은 족히 필요하리라고 내다봤다. 그러니까 10년이나 20년 동안은 투쟁을 자제하고 지식인과 유산자를 핵심세력으로 삼아 단체를 결성하여 중추세력을 형성하는 데 진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광수의 중추세력론은 한마디로 엘리트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조선에는 자유 평등론이 성행하여 명령하는 자와 복종하는 자의 구별조차 무시하려 하니 이르고는 아무런 단체생활도 영위치 못할 것’이라면서 중추세력으로 단체를 결성하여 민중에 대한 계몽과 지도를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주의자들은 민중을 혁명의 주체로 상정했지만 이광수에게 민중은 어디까지나 계몽의 대상일 뿐이었다.

이광수의 이런 시각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사설에 그대로 투영되었다. 두 신문은 지식자와 유산자가 합동하여 민중의 의식을 개혁하고 전통적 관습을 해체하며 교육을 진흥할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런 일련의 계몽활동을 위해 지식자와 유산자가 학교를 세우고 언론을 창달하며 사회단체를 활성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두 신문은 사회개혁을 위해 특히 자주성, 실용성, 근면성, 적극성을 함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사회의 건전한 발달을 꾀하려면 개개인이 자주적 독립적 정신을 가지고 의타적 의뢰심을 버려야 하며²³⁾’, ‘실제 생활에 입각하지 않은 것은 실생활 운동에는 그 관계가 요원하므로 -- 생활 중심, 생존 본위에 필수한 것을 앞세워야 하며²⁴⁾’, ‘부녀자까지라도 하다못해 정미소의 누라도 고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심

21) 이광수 ; 중추계급과 사회, 『개벽』 1921년 7월호.

22) 이광수 ; 민족개조론, 『개벽』 1922년 5월호.

23) 『동아일보』 1927년 3월 5일자 사설.

으로²⁵⁾ 부지런하게 살아야 하고, ‘아이고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고 운명으로 돌리려는 나약한 심리상태를 버리고²⁶⁾ ‘우리 사회를 산 사회로 돌려놓기 위해 우리 스스로 산 사람이 되어야 한다.’²⁷⁾는 것이었다. 관습의 개혁과 관련해서는 주로 보건 관습을 개혁하며 마약이나 사행행위를 근절하며 허례허식을 버리고 미신을 타파하며 풍속을 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나아가 두 신문은 민지개발(民智開發)을 위해 일제강점기에 갖가지 계몽운동을 폈다. 『동아일보』는 동경유학생학우회의 순회강연회를 실시했으며, 학생 브나로드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는 구호를 내걸고 문자보급운동을 벌였다. 물론 모두 엘리트중심론을 바탕으로 한 사회운동이었다.

이런 엘리트중심론이야말로 일제강점기에 양대 민족지가 처음으로 창안한 것은 아니었다. 엘리트중심론은 사실은 『독립신문』을 비롯한 개화기 민족지가 입을 모아 강조한 에토스였다. 개화기에 개화파 지식인들이 말한 개화란 지식엘리트가 계몽운동을 통해 민지(民智)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개화기에 신지식인집단은 민중주의에는 매우 부정적이었다. 『독립신문』은 동학운동을 한 마디로 ‘야만의 행사²⁸⁾’로 규정하며 이른바 창기만국론(倡起亡國論)을 폈다. 『황성신문』은 의병을 ‘나라에 화를 미치는 재앙이요 백성에 해를 끼치는 돌림병’²⁹⁾과 같다고 극언하였다. 이런 논지는 불만에 찬 농민층이 무시할 수 없는 정치적 잠재력을 확보한 상황에서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민족지들은 비난이나 반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줄곧 민중주의 대신 엘리트중심론을 폈다.

2) 대포나 대포를 질 힘이나? : 실력양성론.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한 한국이 독립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전술한 바 있지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한국이 자력으로 일본과 싸워 독립을 이루기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두 신문은 국제정세가 일본에 불리해질 때까지 대세 변화를 기다리면서 꾸준히 실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두 신문은 주의나 주장은 ‘대포와 함께 떨어져야 힘이 있다’면서도, ‘우리에게 필

24) 『조선일보』 1933년 4월 27일자 사설.

25) 『조선일보』 1927년 3월 5일자 사설.

26) 『조선일보』 1924년 11월 5일자 사설.

27) 『조선일보』 1924년 6월 20일자 사설.

28) 『독립신문』 1898년 3월 31일자 사설.

29) 『황성신문』 1906년 12월 14일자 사설.

요한 것은 대포가 아니라 대포를 질만한 힘³⁰⁾’이라고 강조했다. 투쟁론에 대해 이 신문은 대포를 질 힘도 없는데 어떻게 대포를 쏘자는 것이냐, 독립을 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투쟁을 한단 말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양대 신문은 선부른 투쟁주의가 실력양성을 더디게 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개화기에 여러 가지로 여건이 성숙했는데도 불구하고 개화파의 개혁운동이 실패로 돌아간 것은 선부른 투쟁주의 때문이었다는 것이 이들의 진단이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두 신문은 실력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회운동을 벌였다. 물산장려운동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당시 우리나라 상품은 일본 상품에 비해 질이 떨어졌다. 질은 낮는데 오히려 가격은 일본 것보다 비싼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두 신문은 ‘조선 사람은 조선 물산을 쓰자’는 캠페인을 벌였다. 그것이 실력을 기르는 첩경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두 신문은 실력양성을 위해 1920년에 우파 민족주의자를 중심으로 조선교육협회를 결성하여 교육진흥운동을 폈다. 『조선일보』의 이상재(李商在)와 『동아일보』의 장덕수(張德秀)가 나란히 이 운동을 이끌었다. 1922년에는 민립대학 설립운동을 벌였다. 일제가 제국대학을 세우려 하자 민족주의자들은 우리 인재를 기르기 위해 민립대학을 세우기로 한 것이다. 두 신문이 앞장서서 거국적으로 모금운동을 폈다.

일제하 두 신문의 이런 실력양성론은 개화기 신문 역시 강조한 바 있다. 『황성신문』은 ‘생존경쟁이 철혈경쟁보다 우극(尤劇)한 시대³¹⁾’를 맞아 ‘경쟁의 적당력³²⁾’을 확보하기 위해 실사(實事)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립신문』에서 『대한매일신보』에 이르기까지 개화기 민족지들은 불안한 혁명주의 보다는 착실한 실용주의 노선을 견지했다.

3) 분파냐 대동이나? : 대동단결론.

두 신문은 국제정세가 일본에 불리하게 될 때까지 대세를 기다리면서 내적 역량을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든 우든 민족세력은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대동단결론이 바로 민족지의 세 번째 ethos라고 할 수 있다.

이 대동론은 앞에서 말한 바 있는 물산장려운동과 대학설립운동이 좌절한 데 따른 반성에서 출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두 운동이 기대한 만큼 결실을 보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간 원인은 물론 일제의 가혹한 탄압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나

30) 『동아일보』 1925년 3월 5일자 사설.

31) 『황성신문』 1909년 2월 27일자 사설.

32) 『황성신문』 1908년 8월 7일자 사설.

두 운동에 대한 좌우파의 견해차와 갈등도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물산장려운동은 조선 사람은 조선 물산을 쓰자는 애국적인 운동이었다. 이 운동에 호응하여 조선의 소비자들은 가격이나 질에 있어 결코 비교우위를 갖고 있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조선 상품만을 구매했다. 돈을 벌게 된 자본가들은 질 좋고 값이 싼 제품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보답해야 했다. 그러나 자본가는 그런 기대를 저버렸다. 일부 자본가는 심지어 일제 상품을 들여와 상표만을 붙여 폭리를 취했다. 이것은 사회주의자의 시각에서 보면 일본 대자본의 이중적 수탈에 지나지 않았다. 사회주의자들은 당연히 이에 반발했다. 도덕성에 심각한 상처를 입은 물산장려운동은 결국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민립대학 설립운동은 식민지 치하에서나마 고등교육을 본격화하려는 애국운동이었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은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그들의 주장에는 그럴만한 논리가 있었다. 일제하에서 대학을 세워 인재를 양성한들 무엇 하겠느냐, 그 인재들은 기껏해야 관리나 은행원 아니면 교사가 되어 총독부의 식민통치를 돕고, 일본 자본가의 주구 노릇이나 하고,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황국신민화 교육이나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사회주의자들의 비판의 요지였다. 사회주의자들은 대학을 세우기보다는 보통학교를 많이 지어 낮에는 아동들에 대한 의무교육을 강화하고 저녁에는 일반 농민들을 대상으로 야학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학설립운동은 사회주의자들의 반발에 자연 재해까지 겹쳐 좌절하고 말았다.

두 운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민족주의자들은 어떤 운동도 좌우파가 한 데 모인 통일적 구심체가 형성되지 않으면 성공을 기약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반성을 토대로 두 신문은 대동주의 운동을 펴기에 이르렀다. ‘이조 오백년의 봉당사(朋黨史)를 전감으로 삼아³³⁾’ 분열을 극복하고 민족 역량을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술한 바 있는 두 가지 ethos, 즉 중추세력 형성론과 실력양성론에 있어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견해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 대동주의에 있어서는 두 신문은 미묘한 차이를 드러냈다. 『동아일보』는 모든 민족세력의 무조건적인 통합을 주장했다. 이 신문은 이른바 자치주의자들까지 포용의 대상이었다. 『동아일보』의 주장은 소통합론이 아니라 이른바 대통합론이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대동단결의 대상에서 타협주의자를 배제하고 좌우의 진정한 민족주의 세력이 통일전선을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좌우 양 진영이 먼저 자체를 정리하여 호상의 역량을 신임할 만큼의 도정에 올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조선일보』는 이런 견지에서 ‘진정한 신 협동³⁴⁾’을 위해 거사적

33) 『동아일보』 1925년 3월 20일자 사설.

으로 신간회운동(新幹會運動)을 벌였다. 1927년에 출범한 신간회는 급진적 민족주의자, 문화적 민족주의자 및 사회주의자들에게 하나의 거대한 울타리가 되었다. 신간회는 386개의 지부에 8만 명에 가까운 회원을 확보했다. 이 단체는 통합된 민족주의 활동의 구심이 되었다.

4. 실용주의의 현대적 진화.

『조선일보』를 비롯한 주류 신문은 일본이 패망하자 곧바로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임정(臨政) 지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주류 신문은 1947년에 접어들어 단정(單政)을 통해 독립을 추구하는 이승만의 이른바 독립우선론과, 통일정부 수립을 절대 전제로 내세운 김구의 통일우선론이 격돌하는 상황이 되자 이승만 지지로 돌아섰다. 『조선일보』는 통일우선론이 ‘한 개의 이상이나 공론³⁵⁾’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김구를 배소(拜蘇) 반쪽분자로 몰아붙이기까지 하였다.

미소가 국토를 분할점령하고 있고 좌우 주축이 그 양대국에 기대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좌우 주축이 화학적으로 융합하거나, 아니면 중간과가 주도하는 제3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그런 두 가지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두 신문은 현실적인 강력한 엘리트리더십의 소유자 이승만을 구심점으로 삼아 대동단결함으로써 자주독립 자립경제의 시대적 가치를 구현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국면이 위기에 봉착하자 두 신문은 실용주의 노선으로 여론을 이끌어갔다.

두 신문은 박정희 군사정부가 등장하여 국가개발을 목표로 강력한 동원체제를 구축하려 하자 일정 기간 좌고우면(左顧右眄)의 과정을 거쳐 결국은 군부의 국가개발을 지원하는 실용주의 노선을 택했다. 군부엘리트 주도로 국가 재건사업을 펼 수밖에 없다는 인식 하에 그 새로운 엘리트그룹을 중심으로 이른바 국민총화(國民總和)를 이루는 데 협조하기에 이른 것이다. 군부는 70년대 들어 유신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억압기제를 더욱 강화했고, 80년대 들어서에는 이른바 신군부가 등장하여 군부독재를 이어갔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도 두 신문은 대체로 실용주의의 근간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한국의 주류 언론은 현재까지도 엘리트중심으로 대동단결해 실력을 길러야 한다는 실용주의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34) 『조선일보』 위의 사설.

35) 『조선일보』 1948년 1월 10일자 사설.

5. 실용주의의 두 얼굴.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두 신문은 실용주의에 집착했다. 일제강점기에 민중을 동원하는 민중주도론 대신에 지식자와 유산자 유지(有志)에 의존하는 엘리트중심론을 고수했으며, 무장 투쟁에 호소하는 폭력주의 대신에 실력을 강조하는 실력양성론을 견지했고, 사분오열하여 相殘하기 보다는 좌우가 한 데 모여 다양한 세력의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로 엮는 대동단결론을 강조했다. 광복 이후에도 주류 신문의 실용주의는 상황에 맞추어 그 근간을 유지하며 진화했다.

이런 실용주의적 대응 논리는 투쟁주의만큼 정당하지도 않으려니와 자칫하면 현실 안주나 타협주의로 기울 개연성도 안고 있다. 신채호 선생의 <조선혁명선언>에서 좋은 반면(反面)을 엿볼 수 있다.

현재 조선 민중은 오직 민중적 폭력으로 신조선 건설의 장애인 강도 일본 세력을 파괴할 것뿐인 줄 알진데, --- 우리 이천만 민중은 일치로 폭력 파괴의 길로 나아갈지니라.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 무기이다. 우리는 민중 속에 가서 민중과 악수하여 끊임없는 폭력 - 암살 파괴 폭동으로써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의 불합리한 일체 제도를 개조하여 인류로서 인류를 압박치 못하며 사회로서 사회를 압박치 못하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 지니라³⁶).

이 선언에서 엘리트중심론이 아닌 민중주의를, 실력양성론이 아닌 폭력주의를 읽을 수 있다. 대동주의란 찾아 볼 수 없다. 그 대신에 오로지 민중계급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있을 뿐이다. 신채호 선생의 이런 주장은 비슷한 시기에 국내에서도 다양한 인사, 다양한 세력에 의해 제기되었다. 또한 일제강점기에 좌파 지식인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민중주의와 폭력주의를 바탕으로 삼아 민족주의자나 보수언론을 비판한 바 있다.

일제가 망하고 광복이 되자 지식인사회에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두 신문이 신문을 낼 준비를 마치고도 뒤늦게야 복간 호를 내놓게 된 데에는 두 신문에 대한 곱지 않은 시각이 기저에 깔려 있었다. 이런 사실은 두 신문의 노선에는 정통성에 관한 한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방증한다.

한국의 주류 신문은 일제강점기에 왜 타협주의라는 비판까지도 감내할 수밖에 없

36) 신채호(1923), 조선혁명선언. 『대일민족선언』(1972). 서울: 일우문고. 99~111쪽.

는 실용주의를 택했는가? 그들이 실용주의를 택한 것은 한 마디로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자본의 기업이 생존 자체를 걸고 권력과 맞부딪칠 수는 없다. 총독부 치하에서 토착자본이 운영하는 주류 언론 역시 오롯하게 투쟁주의에 집착할 수는 없었다. 흔히 프롤레타리아운동이 프롤레타리아적이듯이 부르주아운동은 부르주아적이게 마련이다. 두 신문이 투쟁으로 일관하기를 기대했다면 그것은 부르주아운동이 프롤레타리아적이기를 기대한 오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런 내적 조건이 그들에게 실용주의를 택하게 했다면, 외적 조건은 그 실용주의의 좌절을 예비했다. 제국주의가 바로 그 외적 조건이다. 일본 제국주의는 우파의 실용주의의 앞길에 이미 좌절을 예치해두고 있었다. 특히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 총독부는 언론에 대한 통제를 대폭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론을 적극적으로 선전도구화하려 했다³⁷⁾. 이런 상황에서 주류 신문은 ‘발행인과 필자들에게 대한 사위(四圍)의 압력과 (총독부) 당국의 끊임없는 지도³⁸⁾’ 때문에 민족 보다는 언론기업의 생존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³⁹⁾. 그 시절에 언론이 권력의 비위를 거스른다는 것은 군부가 천황주권설을 내걸고 파시스트독재를 자행한 일본 본토에서도 꿈조차 꿀 수 없었다.

총독부는 1940년에 ‘조선통치의 기본적 지도 정신은 조선인의 황국신민화에 있는데, 이의 완성은 본질적으로 조선인이 포회(抱懷)하고 있는 민족의식의 저류에 기인하며 형식적으로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존재에 기인하여 저해되고 있다⁴⁰⁾’고 결론지었다. 총독부는 두 신문이 여전히 ‘누누이 교묘한 필치로 독자의 민족의식과 계급의식을 묘사하고 있으며, 소극적인 불온성을 지속⁴¹⁾’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총독부는 두 신문에 대한 조치를 다각도로 검토했다. 총독부의 안(案)에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각각 평양과 대전으로 옮겨 지방지로 간헐하게 하는 비교적 온건한 방안도 들어있었다. 『동아일보』를 경제신문으로, 『조선일보』를 일어신문으로 바꾸는 방안,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합병하여 새로운 민간지나 경제지로 바꾸는 방안 등도 검토했다. 그러나 총독부는 두 신문을 아예 폐간시키는 가장 강경한 방안을 택했다.

주류 신문의 실용주의가 참담한 좌절로 귀결했다면 그럼 두 신문은 역사에 죄를 지었는가? 일제강점기의 두 신문의 역할을 평가하기 전에 우리는 인도의 민족주의

37) 박용규(2008), 일제의 지배정책에 대한 신문들의 논조변화. 김민환 박용규 김문종, 『일제강점기 언론사 연구』. 서울; 나남. 113쪽.

38) 조선총독부 경부국(1937), 『조선출판경찰개요』. 7쪽.

39) 박찬승(2009), 『언론운동』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33). 36~37쪽.

40) 민족문제연구소 편(2000), 『일제하 전시체제기 정책사료총서』 37. 286~287쪽.

41) 위의 책. 286~287쪽.

와 한국의 민족주의를 비교한 로빈슨(Michael E. Robinson)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가 지적한 바와 같이 문화적 민족주의자들은 그들의 운동을 간디의 노선과 비교하곤 하였다⁴²⁾. 특히 물산장려운동의 경우에 그랬다. 이 운동의 지도자들은 간디의 국산품애용운동과 우리나라의 물산장려운동이 매우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화적 민족주의자들은 그들의 운동과 간디의 운동이 완전히 다른 철학적 바탕에서 출발하였다는 사실은 간과하지 못했다. 문화적 민족주의자들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서구나 일본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한국 자본주의를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었지만 간디의 운동은 서구문명을 기준으로 한 경쟁으로부터 인도를 해방시키는데 목표를 둔 것이었다. 간디의 운동은 인도를 서구적 수준으로 발전시키는데 목표를 둔 것이 아니라 현 상태에서 종속을 회피하며 독립을 추구하는데 목표를 둔 것이었다. 인도에서도 교육운동이 전개되었지만 그것은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목표를 둔 것이 아니라 인도의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었다. 간디의 운동이 우리나라의 문화적 민족주의에 비해 대중적 지지를 얻은 것은 바로 그런 철학적 배경 때문이었다.

인도의 민족운동은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거부하기 위해 자본주의나 근대화까지도 부정하고 전통주의에 집착함으로써 정통성을 확보하고 대중적 지지를 얻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정통성 자체가 효용성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인도는 2차대전이 끝나 독립을 얻었지만 오랫동안 전근대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물론 인도가 전근대성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나 근대화까지도 거부한 정통성에 치우친 민족운동이 독립 이후의 근대화 일정에 일정 정도 굴레로 작용했다는 로빈슨의 가설은 귀를 기울이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확고한 정통성에 바탕을 둔 아랍민족주의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세계 민족주의운동 가운데 가장 투쟁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는 아랍민족주의는 정통성에서는 탁월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위한 효용성의 측면에서는 다른 평가가 가능하다. 인도와 아랍은 정통성을 바탕으로 한 당당한 민족운동을 폄거나 펴고 있지만 그 지역에서 자본주의나 민주주의는 아직까지도 좀처럼 햇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한국의 주류 신문은 투쟁주의 대신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실용주의를 택했다. 식민지 치하에서도 물산장려운동을 펴는 등 실력양성을 추구했다. 이런 실용주의 노선은 현상유지는 물론 타협주의로 진전할 개연성을 안고 있었다.

광복 이후에도 두 신문의 실용주의에 대한 집착은 대체로 유지되었다. 두 신문은

42) Michael Robinson; Cultural Nationalism in Colonial Korea, 1920-1925. (Univ. of Washington Press, 1988) pp.165~166.

실력양성을 궁극적 목표로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 엘리트 중심으로 총화 단결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인식을 당대의 엘리트집단과 공유했다. 그런 인식의 저변에는 통일국가 건설이나 민주주의 확립이라는 가치는 어느 선에서 한정하거나 일정 기간 유예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었다. 두 신문은 정통성 보다는 효용성을 추구하고자 한 것이다.

실력양성을 목표로 하는 실용주의는 정통성의 측면에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민족해방이나 통일국가 건설, 민주주의 구축이라는 이상적 가치에 천착하다보면 실용주의에 대한 평가는 인색해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효용성의 측면에서 보면 전혀 다른 해석 역시 가능하다. 분명한 것은 정통성을 추구하는 흐름과 효용성을 추구하는 흐름은 겉으로는 대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둘은 실제로는 일종의 보완재(補完財)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6. 결어

우리 사회는 이제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문턱에 서 있다. 반도체, 휴대폰, TV 수송기, 철강, 조선, 자동차 등 최첨단 기술 산업분야에서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것도 박정희 시대와 같이 정부 통제 하에서 철저한 계획체제로 정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강력한 노동자조직이 버티고 있는 가운데 선두권을 지키고 있다.

정치적으로도 우리는 아시아의 어느 나라보다 앞선 민주체제를 정착시켰다. 대통령에 대해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비판을 해도 보복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만큼 민주주의도 확고하게 정착했다. 디지털을 이용한 대중의 정치참여가 매우 역동적이어서 세계적으로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정통성에 치우쳤던 이들이 효용성의 가치를 인정하고, 효용성을 강조한 이들이 정통성의 중요성을 재인식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가운데 민주주의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살아온 이라면 실용주의자들이 우리 사회의 자본주의 발전을 위해 흘린 땀의 가치에 대해 재평가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가운데 자본주의에 더 역점을 두고 살아온 이라면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싸운 민주화 운동가들의 공을 재인식해야 한다.

흔히 말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갈가리 찢겨 있다. 보수와 진보가 이진투구를 벌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갈등이나 세대 간의 갈등도 매우 심각하다. 분열과 길항으로 바람 잘 날이 없다. 그래서 사회통합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통합은 좌우가 하나가 되자는 신간회 시절

의 그것과 같을 수는 없다. 이념의 차이, 세대의 차이, 또는 지역의 차이를 넘어 하나가 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상대방의 존재가치를 인정하고 서로 타협이 가능한, 공존이 가능한 지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런 새로운 개념의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주류 언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확고부동한 자세로 어느 한 편을 지지하는 것일까, 아니면 타협이나 공존이 가능한 지점으로 스스로 이동하는 것일까? 어느 것이 언론의, 저널리즘의 본연의 자세일까? 분명한 것은 두 가지 길 가운데 어느 것을 택하는지에 따라 그 신문이나 우리 사회의 품격이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

<참고문헌>

『한성주보』

『독립신문』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민족문제연구소 편(2000), 『일제하 전시체제기 정책사료총서』 37.

박용규(2008), 일제의 지배정책에 대한 신문들의 논조변화. 김민환 박용규 김문중, 『일제강점기 언론사 연구』. 서울; 나남.

박찬승(2009), 『언론운동』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33). 서울; 한국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

신채호(1923), 조선혁명선언. 『대일민족선언』 (1972). 서울; 일우문고.

이광수(1921), 중추계급과 사회, 『개벽』 1921년 7월호.

이광수(1922), 민족개조론, 『개벽』 1922년 5월호.

조선총독부 경부국(1937), 『조선출판경찰개요』.

Michael Robinson; Cultural Nationalism in Colonial Korea, 1920-1925. (Univ. of Washington Press, 1988).